201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Brief

2016. 12. 21

집필자
김동영_ (미래전략연구부 부연구위원)
이중섭_ (미래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조경욱_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황영모_ (농업농촌식품연구부 연구위원)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Jeonbuk Institute

jthink 전북연구원

201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

Brief

정책브리프 2016년 12월 21일 vol.12 발행인_강현직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프는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1. 전라북도 인구현황과 함의 ····· 05
2.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 07
3. 인구정책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 09

※본 정책브리프는 정책연구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전략'보고서 중 일부를 재구성 하여 작성하였음

SUMMARY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 요약 -

○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대부분 저출산과 고령화에 집중되었고 최근 청년정책과 과소화마을 등으로 정책분야가 확대됐지만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를 상수에 둔 통합적 접근 필요

○ 인구감소 대응 또한 다양한 정책분야 중 하나로 다루어졌지만 한국고용정보원(2016)의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보고서를 통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방소멸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지방의 생존문제로 급부상

○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방향은 생산과 소비 및 공동체 활동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미래인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4대 정책방향 설정

○ **(지역공동체 유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할 주체의 부족과 추진동력 상실, 새로운 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저하 등으로 전문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공간단위 재설정 및 공동체적 가치확보 투자

○ **(저출산·고령화시대 대응)**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아 출산정책 및 출산비용 프리선언 등의 지역적 차원의 적극적 출산정책과 근로기간 중에 저축여력을 확대하고 은퇴이후 지속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유지할 수 있는 노인 맞춤형 직업훈련 등에 투자

○ **(생산가능인구 유지관리)**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116만명과 핵심근로인구(25세~49세) 63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창업, 여성근로참여와 더불어 외국인재유입 등의 적극적 정책 도입 필요

○ **(도농 인구불균형 관리)** 시·군 단위의 특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도내 인구 중 77%가 집중돼 있는 중추도시권과 과소화지역이 많은 농촌지역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대한 특화된 인구정책 필요

○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비전 슬로건은 인구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삶의 질, 일자리, 인구유입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로 설정

○ 분야별 상징단어를 연계하여 전라북도 인구정책 비전을 "살고, 일하고, 돌아오고 싶은 전북"으로 설정하고 줄여서 "3GO 전북"으로 설정

○ 전라북도 4대 인구정책방향과 인구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정책관신설, 인구종합계획수립, 중핵도시육성,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청년창업특구, 다문화친화도시 추진 6대 중점추진과제 제안

○ **(인구정책관 신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인구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팀을 주무팀으로 저출산, 청년, 농촌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직체계 개편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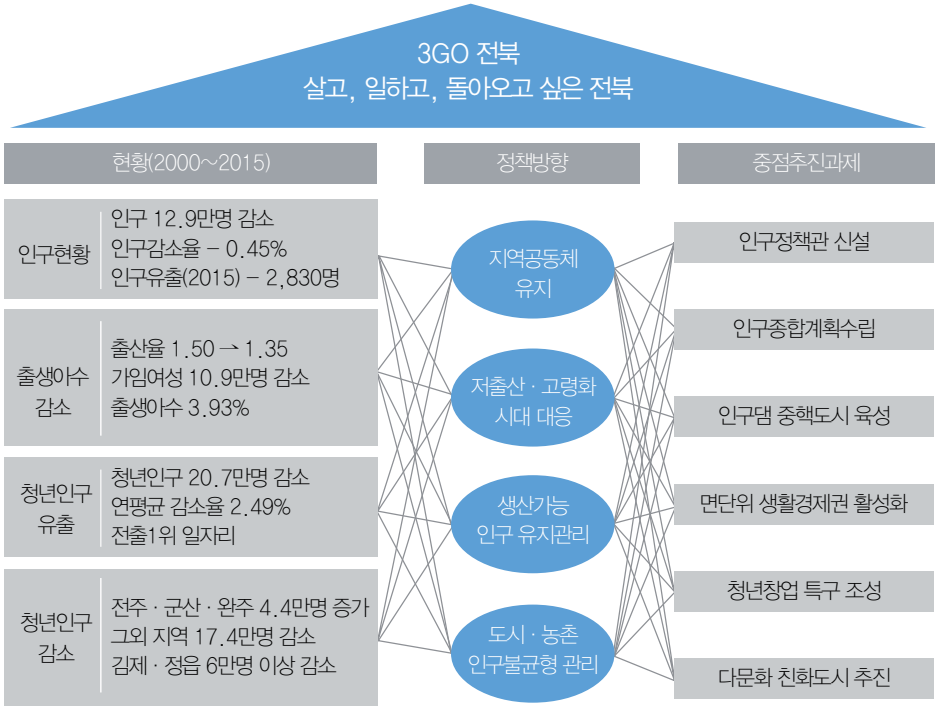
○ **(인구종합계획 수립)** 인구종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구변화에 영향을 받는 요소, 전라북도 인구정책 등을 고려한 전라북도 인구종합계획 수립 및 인구집중관리지표를 개발하여 통합적 인구관리

○ **(중핵도시 육성**) 전라북도 인구이동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 다시 타 시도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어 권역별 거점도시를 지정하고 특화산업 집중육성, 보건 · 의료 거점화, 교육 · 문화 서비스 특화전략 등을 통한 중핵도시 육성

○ **(면단위 생활경제권 활성화)** 농촌 생활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가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작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삶의 질 서비스를 촘촘히 재구축하여 주변지역과 교류를 통한 지역활성화 추진

○ **(청년창업특구 조성)** 전라북도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경쟁력있는 자원을 토대로 청년창업학교운영, 청년창업자 주거지원, 입주공간지원, 창업자금지원, 데스밸리 극복지원, 상품디자인 및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특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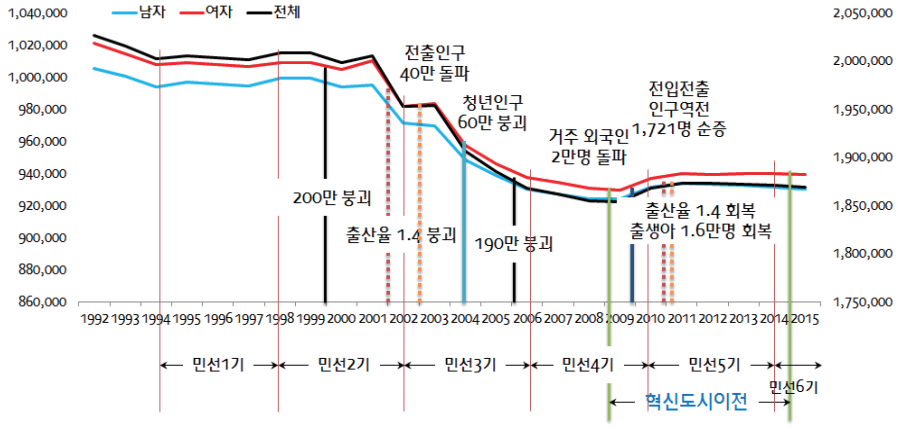
○ **(다문화 친화도시 추진)** 2040년 27.1만명이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영입으로 전라북도의 새로운 산업혁신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라북도 다문화친화도시 전략 추진



〈그림〉 전라북도 인구정책 비전 및 사업체계

1. 전라북도 인구현황과 함의

○ 전라북도 인구는 2001년 199.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185.4만명까지 감소하였고 2011년 187.4만명까지 증가한 이후 2015년 186.9만명으로 완만한 정체기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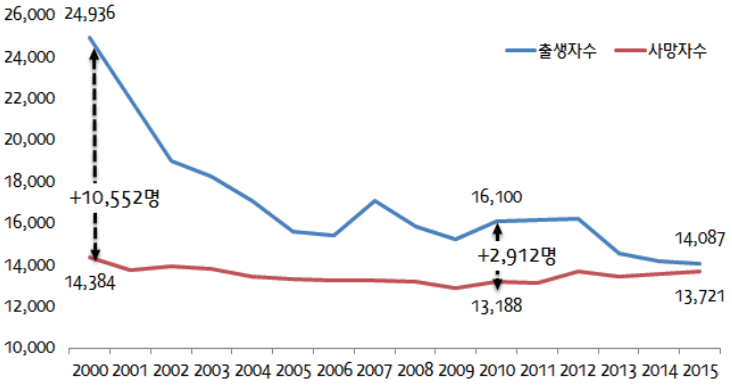


<그림-1> 전라북도 인구추이와 시기별 경향

○ 전라북도 인구변화 요인은 크게 자연인구감소와 인구유출 증가로 볼 수 있음

○ 전라북도는 2015년 기준 출산율이 1.35명으로 전국 도 평균인 1.36명보다 낮고 가임여성 또한 2000년 52.6만명에서 2015년 41.7만명으로 연평균 1.53% 감소 추세이며 혼인건수는 2000년 11,362건에서 2015년 9,060건으로 20.2% 감소

○ 그 결과 2000년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10,552명 많았지만 2015년 366명으로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월하는 인구자연감소지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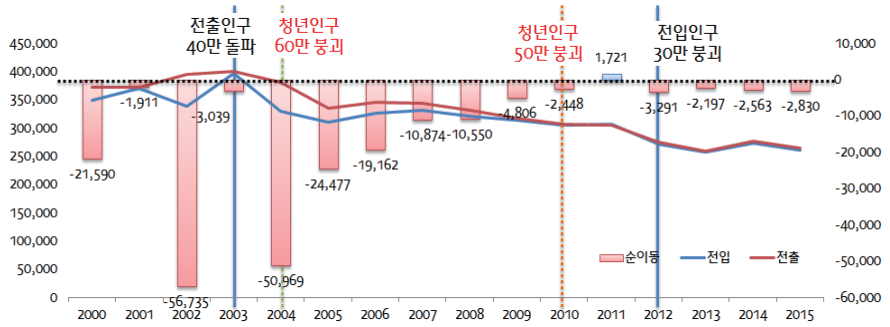


<그림-2> 전라북도 출생자 및 사망자 추이

06

○ 전라북도 순인구이동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았으며 2002년 순인구유출 5.6만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최근 2천명대의 순인구유출을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인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출산율 감소에 의한 인구 자연감소 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유출



〈그림-3〉 전라북도 전입·전출인구 추이 및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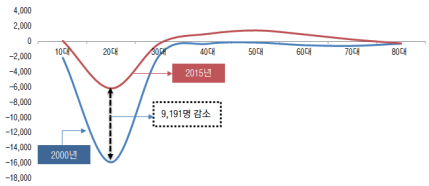
○ 전라북도 인구분석을 통해 도시권 인구집중화와 농촌인구 감소, 청년인구 유출, 전출이유는 직업과 가족, 가임여성 감소와 출산율 상관관계 유동적이라는 함의를 도출

○ (도시권 인구집중화와 농촌인구감소) 전주, 군산, 완주 등 3개 지역 인구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4.4만명이 증가하였지만 그 외 지역은 모두 101.7만에서 84.3만명으로 17.4만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김제, 정읍은 26.8만명(2000년)에서 20.5만명(2015년)으로 가장 큰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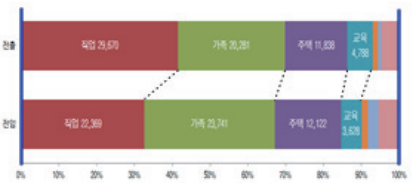
○ (청년의 유출과 장년의 유입) 전라북도 연령대별 인구는 40대 이후 장년층은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년인구는 65.8만명(2000년)에서 45.1만명(2015년)으로 연평균 2.49%감소하였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유출인구 심각

○ (전출사유 1순위는 직업) 전라북도 전출지역은 수도권은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은 확대되었고, 전출이유는 직업과 가족이 가장 높은 비율

○ (가임여성 감소와 출산율 상관관계 유동적) 전라북도의 가임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출생아 수는 증감을 거듭하고 있어 가임여성의 수와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는 낮음



〈그림-4〉 연령대별 순인구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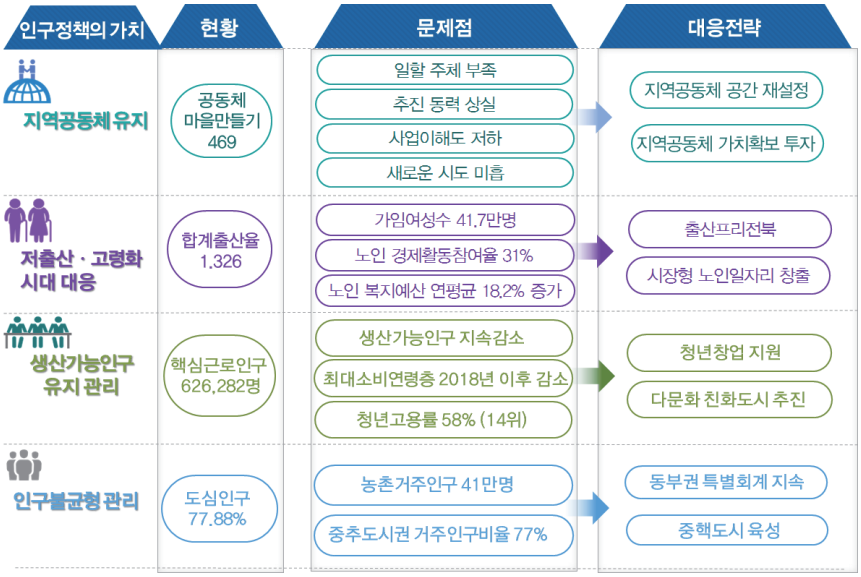


〈그림-5〉 전라북도 전입·전출 사유

2.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 전라북도 인구정책은 생산과 소비 및 공동체 활동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미래인구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향에서 설정

○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방향은 목표나 전략이라기 보다는 전라북도가 인구정책을 바라보는 가치적 측면이 강함



〈그림-6〉 전라북도 인구정책 방향

(1) 지역공동체 유지

○ 지역공동체의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정주단위를 기본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역공동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아래로부터의 지역활성화와 지역발전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초단위로 지역공동체를 주요한 정책적 주체로 여기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음

○ 지역공동체에 의한 안전, 협동, 활력, 사회적 건강성 등 다양한 요소가 지역공동체의 파괴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신과 무관심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전라북도의 지역공동체는 과거보다 지리적 인접성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일할 주체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음

○ 결국 고령화로 인해 일할 주체의 부족과 추진동력 상실, 새로운 시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저하 등으로 전문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 발생

○ 최소한 마을단위의 지역활성화 기초단위로서 지역공동체의 설정을 변화하는 인구와 공간구조에 맞춰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설정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신뢰, 호혜성, 상호협력 등의 증진을 위한 공동체적 가치확보를 위한 사업투자 필요

(2) 저출산·고령화시대 대응

○ 전라북도는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2000년 1.579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5년 1.326으로 감소하였으며 출생자 또한 24,936명에서 14,087명으로 감소

〈표-1〉 전라북도 출산율 및 출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출산율	1.579	1.263	1.227	1.175	1.204	1.305	1.374	1.440	1.329	1.326
출생자	24,936	19,026	17,087	15,618	15,450	15,878	16,100	16,238	14,231	14,087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

○ 저출산 트렌드는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전세계적 흐름으로 전라북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대적 단위는 아니지만, 출산비 전액 감면, 다문화 결혼이민 확대, 혼외자 출산 장려 등의 전라북도 차원의 정책 추진 필요

○ 저출산과 더불어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복지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 복지비용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의료, 생계 등의 비용증가에 의해 가계의 재정부담으로 이전되어 개인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간 중에 저축여력을 확대하고 은퇴이후 지속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전라북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기존 공공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공비용을 투자한 단기 일자리로 비용대비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정책 필요

(3) 생산가능인구 유지관리

○ 우리나라는 출생아수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15년째 이어오면서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줄어들기 시작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경제의 주요동력인 인적자원의 부족을 의미하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4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

○ 전라북도는 생산가능인구가 약 117만(2005년)명에서 약 116만명(2015년)으로 9,559명이 줄어드는 반면, 핵심근로인구는 약 72만명(2005년)에서 약 63만명(2015년)으로 89,197명이 줄어들어 핵심근로인구의 감소폭이 훨씬 큰 상황

○ 가계소비를 가장 크게 하는 연령인 전라북도 47세 인구를 보면 2018년 32,205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23,041명으로 줄어들어 생산을 해도 소비인구가 부족한 소비절벽에 이를 것으로 예측

○ 2015년 기준 현재와 같은 생산가능인구와 핵심근로인구를 각각 116만명과 63만명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창업, 여성근로참여와 더불어 외국인재유입 등의 적극적 정책 도입 필요

(4) 도농 인구불균형 관리

○ 도시의 급격한 인구쏠림과 농촌의 과소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불균형 현상의 가속화

○ 전국적으로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중 약 4,698만명이 읍 · 면 · 동 이상의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면단위 농촌지역 거주인구는 483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62%가 도시에 거주

○ 전라북도의 경우 읍 · 면 · 동 이상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46만명, 면단위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41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율보다는 낮지만 도시지역 인구비율이 77.88%로 전라북도와 인구구조가 유사한 전라남도 67.36%보다 높은 상황

○ 정부차원에서 시 · 군단위의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향기부제 또는 공동체기금과 같은 민간차원의 재정확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 필요

○ 전라북도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증가정책이 아닌 도내에서 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시지역인 중추도시권과 과소화지역이 많은 농촌지역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대한 특화된 인구정책이 필요

3. 인구정책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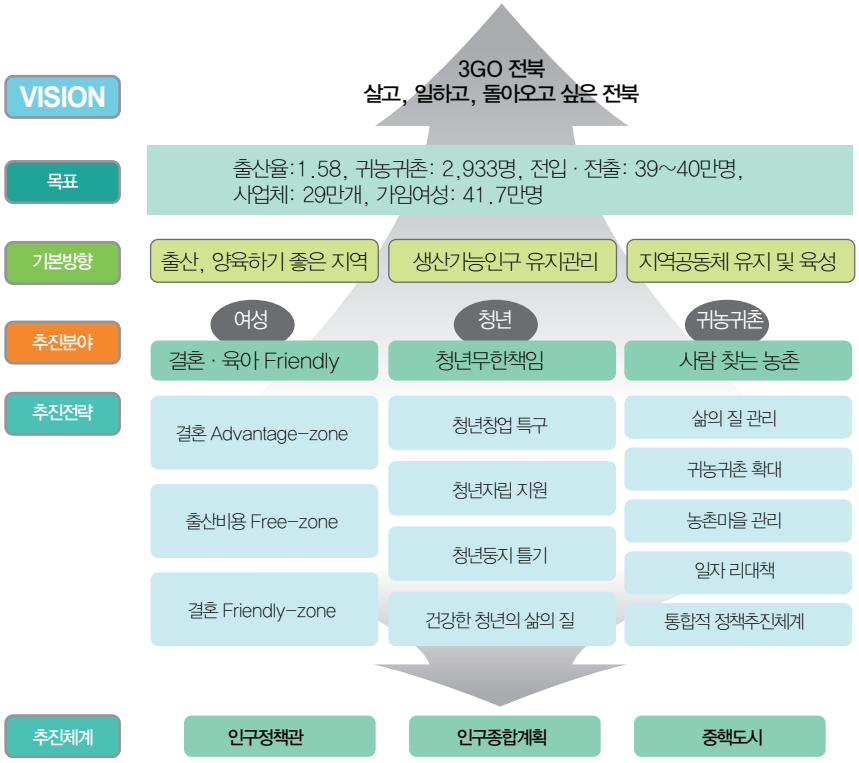
(1) 전라북도 인구정책 비전

○ 전라북도 비전 설정은 인구현황 검토, 시사점 도출, 현황과 시사점을 통한 인구정책방향 설정, 중점추진과제 설정,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순으로 검토

○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비전 슬로건은 인구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삶의 질, 일자리, 인구유입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로 설정

○ 분야별 상징단어를 연계하여 전라북도 인구정책 비전을 “살고, 일하고, 돌아오고 싶은 전북”으로 설정하고 이를 줄여서 “3GO 전북”으로 설정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전라북도의 최고 성과를 정량적 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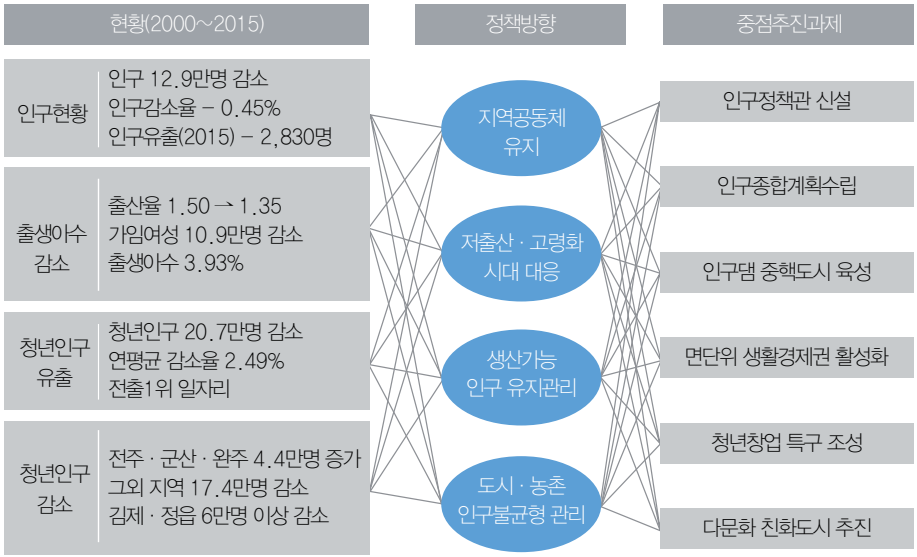


<그림-7> 전라북도 인구정책 비전체계

(2) 중점추진과제

○ 전라북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인구 자연감소 분야는 출산율, 가임여성, 출생아 수 등이며 인구이동 분야는 전입, 전출, 청년유출 등으로 볼 수 있음

○ 인구영향요소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인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4대 인구정책방향이 설정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구정책관신설, 인구종합계획수립, 중핵도시육성, 면단위생활경제권활성화, 청년창업특구, 다문화친화도시 등 6대 중점 추진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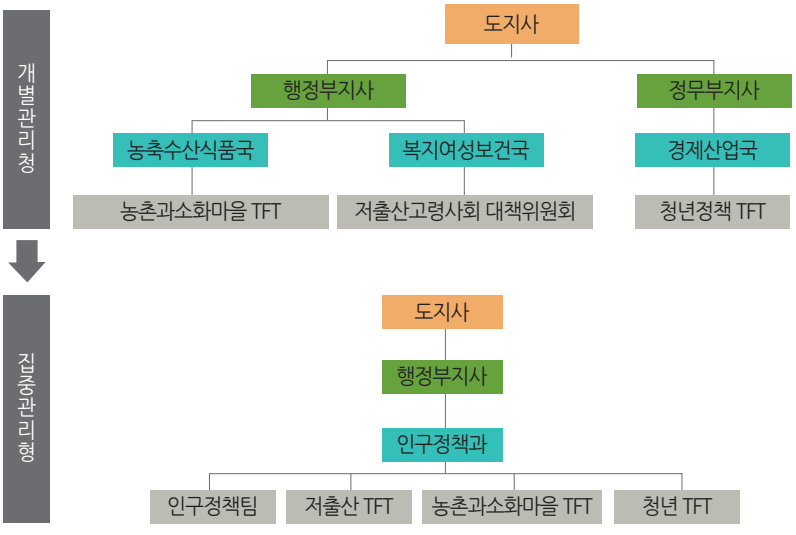


〈그림-8〉 전라북도 인구정책 사업발굴체계

① 인구정책관 신설

○ 전라북도는 현재 인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

○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사업은 복지여성보건국을 중심으로 저출산 TFT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인구감소문제는 농축수산식품국을 중심으로 농촌고령 · 과소화 대응 TFT를 운영하고 있고, 청년정책은 경제산업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TFT를 운영 중에 있음



〈그림-9〉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직체계 개편안

○ 전라북도 인구정책 관리체계는 각 부서별로 저출산, 과소화마을, 청년정책 등을 추진하는 개별관리형으로 되어 있어 통합적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 인구관련 정책인 저출산, 청년, 농촌과소화사업은 담당부서 이외도 모든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지만 각각의 대응전략팀 또는 TFT가 전담부서 산하에 있어 타 부서에 조직적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인구정책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팀을 주무팀으로 저출산, 청년, 농촌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직체계 개편

② 인구종합계획 수립

○ 인구는 아무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도 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최소한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센서스의 확보가 관건

○ 현재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또한 장기적인 인구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필요

○ 전라북도에는 인구와 관련된 요소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통계나 현황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없음

○ 시 · 군별로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관련 자료들이 기준과 시점이 달라 통합적 자료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 발생

○ 전라북도 과소화마을 현황이나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별 사회·경제생태계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구와 관련된 종합적 실태조사 필요

○ 인구종합실태조사를 토대로 장래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구변화에 영향을 받는 요소, 전라북도 인구정책 등을 고려한 전라북도 인구종합계획 수립 필요

○ 인구종합계획과 더불어 전라북도 인구집중관리지표를 개발해 전라북도 인구구조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③ 중핵도시 육성

○ 전라북도 인구에 가장 큰 영향요소인 인구유출은 크게 전라북도에서 타 시 · 도로의 전출과 전라북도내 시 · 군간의 전출로 볼 수 있음

○ 통계청(2015)에 따르면 2015년 전라북도 총 인구이동 현황은 261,832명이며 이중 전라북도내 인구이동 즉 시 · 군간 순이동은 193,076명, 타 시 · 도간 순이동은 68,756명으로 도내 인구이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

○ 전라북도내 시·군간 인구이동은 농촌지역 인구의 유출과 도시지역 인구유입 특히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지역의 인구유입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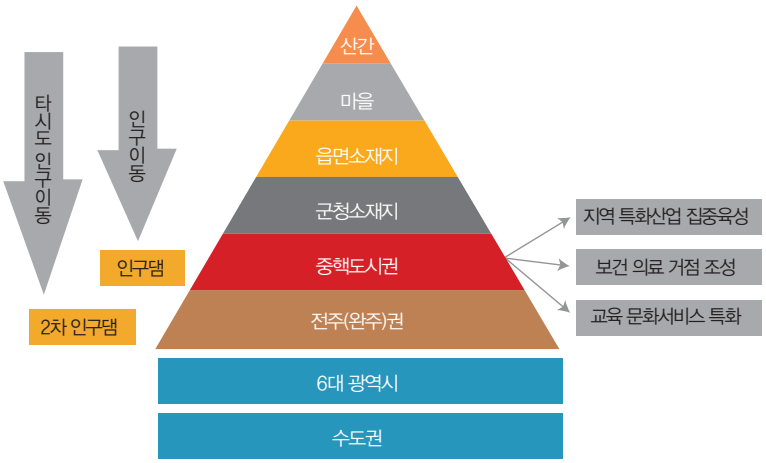
○ 결국 전라북도 인구이동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 다시 타 시 · 도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간마을, 읍면소재지, 군청소재지 등의 인구이동을 잡아둘 수 있는 권역별 중핵도시육성이 필요

○ 중핵도시는 기존 지역생활권사업이 지역간 수평적 연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된 것과는 달리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

○ 권역별 중핵도시 조성을 위해 거점도시에 권역별 특화산업 집중육성, 보건 · 의료 거점화, 교육 · 문화 서비스 특화전략이 필요

○ 인구 댐 역할을 할 권역별 중핵도시 선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전라북도 지역생활권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전면적 개편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함



〈그림-10〉 인구유출경로 및 중핵도시 개념도

④ 면단위 생활경제권 활성화

○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가 농촌지역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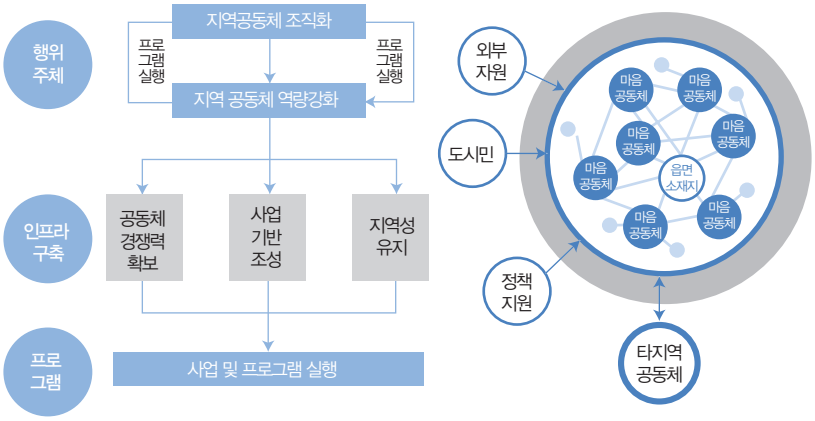
○ 지역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지역에서 해나갈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한 선결대책임

○ 그 대응전략이 '면단위 생활경제권'으로 사람이 줄고 이용자가 없어 수익이 맞지 않아 사업장을 철수해 삶의 질 관련한 시장 자체가 없어진 농촌지역을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농촌지역 주민이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생필품의 적정한 구입, 소량 다품목 농산물(가공품)의 판매, 미용관련 서비스(미용실 · 목욕탕 등), 공동체 교류활동' 등을 꼽을 수 있음

○ 면단위 생활경제권 구축은 이러한 생활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가 일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작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육, 복지, 의료 등의 삶의 질 서비스를 촘촘히 재구축하는 전략임

○ 지역주민의 생활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류활동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



〈그림-11〉 면단위 생활경제권 활성화 체계

⑤ 청년창업특구 조성

○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고용절벽이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

○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타계하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특히 청년창업을 통해 미래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

○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 중소기업청의 기술창업활성화를 위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 등을 추진 중

○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기존 기업에 청년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부족한 전라북도로서 사업성과의 한계가 있음

○ 전라북도 청년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의 경쟁력있는 자원들을 창업과 연계하고, 창업과 마케팅 및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청년창업특구와 같은 청년창업 활성화 지구가 필요

○ 전라북도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1곳의 청년창업특구를 지정하고 청년창업특구 내에는 청년창업학교 운영 및 청년창업자 주거지원, 입주공간지원, 창업자금지원, 데스밸리 극복지원, 상품디자인 및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컨테이너 모듈하우스를 활용해 청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상점, 라이프스타일 및 문화예술공간, 커뮤니티공간, 제품디자인실 등을 갖춘 복합 판매·문화공간 조성

서울시 플랫폼 창동61

- 컨테이너 활용 복합문화공간
- 연면적 2456㎡에 건축면적 2241㎡
- 클럽공연장, 쿠킹 · 패션ㆍ포토클래스, 커뮤니티, 레스토랑, 상점, 카페
- 교육 및 대관

영국 런던 박스파크

- 런던 이스트앤드 팝업 쇼핑몰
-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2011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적은 자금으로 비즈니스 시작 의도
- 쇼핑몰을 중심으로 카페, 식당 운영

〈그림-12〉 컨테이너 활용 쇼룸 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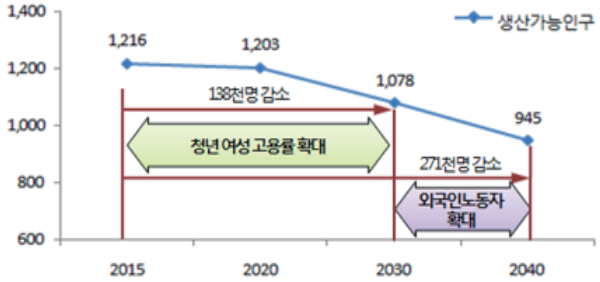
⑥ 다문화친화도시 추진

○ 전라북도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에서 2015년까지 추세를 기준으로 추세분석을 하면 2030년에 13만 8천명이 감소하고 2040년이면 27만 1천명 이상 감소

○ 전라북도가 생산가능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출산정책,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고용률 확대정책과 더불어 2030년이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지를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 유치전략 필요

○ 전국 230개 지역의 총인구수와 외국인 수의 산점도를 분석해 보면 이 두변수 간에는 일정한 상관관계(r=.648, Sig=.000)가 존재해 외국인수가 증가할수록 총인구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근로자 중 메인타깃을 외국국적동포로 설정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교육비지원 등과 같은 외국국적 동포의 도내 일자리 취업을 적극지원



〈그림-13〉 전라북도 생산가능인구 추세 및 대응전략

○ 또한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 유치 전략이 아닌 외국인 인재영입 전략을 통해 전라북도 생산가능인구 확보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혁신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라북도 다문화친화도시 전략 추진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